

「石油은 현대經濟의 血液이다」, 「現代文明의 歷史는 잉크가 아닌 石油로 寫어졌다」

이미 더 이상 인용하기도 陳腐해진 표현들이지만, 오늘날 인간의 生活에서 缺레야 缺 수 없을 만큼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의 石油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 油價와 國民經濟

19세기 중엽 美國에서 최초의 油田이 발견된 이래 古 燃料인 石炭보다도 깨끗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등으로 인류의 에너지源으로 大宗의 위치를 지켰은 石油은 지금은 단지 기초原動力의 제공뿐만 아니라, 缺아될 수 없을 만큼 많은 日常소비용품의 原料로서 오늘날 世界의 어느 한구석에서 단 하루라도 석유를 使用치 않는 날은 缺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62년 油公의 設립을 시발로 后진국 그룹에서 脫피하려는 국가경제적 需要에 따라 精油산업이 탄생한 이후 主油從炭이라는 정책轉換에 힘입어 70年代의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末인 현재 적어도 外형적으로 是 成熟期에 도달했다고 보여진다.

그 4半世紀의 기간 동안 우리는 소위 「漢江의 奇蹟」이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빈약한 資源하의 수출主導型(Resource-poor, export-led)이라는 국제정세 종속적 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世界油價의 騰락에 일희일비를 거둬들 왔던가를 생각해 보면 韓國경제에 있어서 石油의 比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을 것이다.

멀리 돌아볼 필요도 없이 「안정속의 高度成長」을 최대의 經濟治績으로 내세웠던 5共和國하의 政策담당자들도 이 과정상에 있어 單一最大의 변수로 1980~87년 사이에 비교적 安정세를 보였던 국제油價를 꼽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본다.

기실 악몽이라고(당시로서는) 표현될 수 밖에 無었던 19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위기(oil shock)는 국제油價의 급격한 상승을 통해 우리나라의 經濟 전반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崔 成 鎮

〈코리아헤럴드 經濟部 記者〉

우선 경제성장율의鈍化 및 감소를 가져왔고, 국제수지赤字를 확대시켰으며, 일반물가를 상승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등 온통 좋지 못한 영향 一色이었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국제油價의 급격한 변동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경제전문가들은 우선 우리나라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1차에너지소비의 50% 이상을 석유에 의해 충족시켜왔고, 그것도 전량 海外로부터의輸入에 의존해온 소위 非産油 開發途上國(Non-oil developing Countries) 그룹의 일원임을 들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구조가 수출주도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輸出用原資材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변화와 이에 따른 세계 무역환경변화에 크게 左右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記者의 극히 초보적인 경제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油價의 상승은 우선 原油輸入額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Oil bill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총수입액의 증가를 가져온다. 즉 석유위기의 영향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국제수지부문이다.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원유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증가는 그만큼 우리의 실질소득이 석유輸出國으로 移轉(transfer)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유가상승은 外價증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원인인 것이 석유수입액 증가분만큼 차관에 관한 원금 및 利子상환이 불가능 내지는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油價상승은 石油수입국 기업의 생산비와 국민의 생계비를 상승시킴으로써 일반물가와 勞賃의 양등을 유발케 된다. 이러한 物價 및 賃金의 상승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이 모든 시나리오의 종착점은 결국 경제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로 불리는 「不況속의 物價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油價상승은 석유수입국의 경제를 침체시키고 세계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국제무역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석유수입국의 수출부진→국제수지악화→경제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끔 만든다.

석유위기관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석유공급의 감소로써가 아니라, 이렇듯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석유수입국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충격(shock)이라고 할 수 있을진대 수입국입장에서 低油價를 하나의 축복이라 볼 때 高油價는 반대로 재앙인 셈이며, 흔히 에너지 정책담

당자들이 어느 시기에 이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소위 happy한 장관과 불행한 장관으로 별칭되는 것도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李鳳瑞 동자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석상에서 전력요금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稅金의 성격을 지닌 Utility(전력, 수도등 公共서비스)요율을 예전처럼 관리 몇사람이 모여 인위적으로 算出해낼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와 原價주의에 입각해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요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본인은 당시 李장관의 발언을 요즘 한창 운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흐름과 관련하여 정책전환의 일단을 목격하는 듯한 신선한 느낌으로 받아 들였으며, 아울러 이제껏 口頭禪에 그쳤던 油價自律化의 정책목표와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사실 이제까지 油價는 하나의 경제상품적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적인 전략상품이라는 대전제하에 정부의 철저한 개입과 통제하에 놓여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민생과 경제전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에 의해 물가를 잡는 속죄양(Scapegoat)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오죽하면 일단 流動性 과잉 및 물가안정의 조짐이 보이면 국제油價를 확인한 후 국내油價인하를 점치는 것은 경제부기자의 慣行처럼 되어 버렸을까.

솔직히 功을 칭찬하는데 인색하고 過를 추궁하는데 익숙한 것이 각박한 言論의 속성이지만, 이러한 정부통제下의 石油政策이 그 성과 못지않게 부정적 흔적을 많이 남겨놓은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각 유통단계별 부터 최고 소비자가격까지 결정·告示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경제효과가 소비자단계 이전에서 단절된 것은 이미 오랜 일이나,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정책수행 비용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석유사업기금 징수등은 한편으로는 행정력의 남용이란 비난을 들어왔고, 국민으로부터는 國際價보다 비싼 제품을 쓰고 있다는 불필요한 인식을 가지게 했다.

반면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각기 다르고 각각 투입 및 산출 Mix가 같을 수 없는 精油社들로 하여금 동일한 조건(가격)下에 판매를 종용함으로써 이윤추구의 최대 인센티브를 상실한 채 自生力을 키우지 못하게끔 만든 것

도 부인할 수 없다.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의 확보라는 다소 상호이율배반적이리 만큼 험거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로 돌릴 수 있겠지만, 2차석유위기 이후 前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던 정부로서는 일단 原油를 확보한 후 국내에서 정제한다는 소비지정제주의의 대 원칙과 취약한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석유제품의 수출입에 엄격한 승인제도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성에 입각한 구매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石油은 하나의 종합상품(Joint product)으로 흔히 한마리의 소에 비유된다. 즉 소 한마리를 잡아 등심, 안심, 갈비등으로 따로 골라내듯 原油에서 燈油, 輕油, 重油등의 다양한 제품을 정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수입 쇠고기의 특정부위가 韓牛보다 질 좋고 가격이 싸듯이 석유제품은 종류에 따라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의 경제성이 다를 것인데, 이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규제함으로써 최종 소비자들로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로서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石油에 대한 代替材가 본격 개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일단 미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해 공급자의 물량조절에 의한 가격등락을 방지한다는 의도도 있겠고, 대부분 재벌그룹에 소속되어 여러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유사가 정제부문에(소비자 가격에 轉嫁가 허용되는) 비용을 극대화해서 경비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부담만 加重될 수 있다는 것 등등이 정부주도 석유정책의 이유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제·사회 각계에 불고있는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의 거센 바람은 정부로 하여금 지난 날의 정책결정 방식과 운용패턴등에 일대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즉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民主化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려는 욕구의 분출이 두드러지는 한편,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이 최대한 공개된 가운데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정부도 이제까지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보살피겠다는 어떻게 보면 과보호적인 어미닭 심리(Mother hen mentality)에서 벗어나 갓낳은 새끼들을 버림아래로 밀어

내 다시 기어오르는 자에게만 젖을 준다는 사자와 같은 산업육성책으로 전환할 때, 궁극적으로 개방화·국제화에 대한 기본준비의 시발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精油社의 경우 자유경쟁의 소지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마치 하향식 평준화를 초래한 현행 고고입시제도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年初 업무보고자료의 말단 구석에 궁극적인 油價自律化추진이 형식적으로나마 등장한지도 수년째이고 보면 공연히 일을 벌여 위험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매너리즘 보다는 현실적이고 점진적이거나 可視的인 결실을 맺어 보겠다는 所信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으로 지금이 결코 이르지 않는 느낌이다.

油價의 자율화가 궁극적인 목적지라면 규제의 완화를 통한 자율성 提高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규제위주의 정유산업에 대한 각종 法規와 제도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감안, 포괄적이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정부·업계·학계를 망라한 衆智를 수렴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油價는 단기적으로는 구조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부분 세계의 전문가들은 油價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石油가 최소한 오는 2000년대초까지는 세계의 主宗 에너지源으로 그 위치에 변함이 없을 것이며, 또 현재는 과욕에 의한 자중지란으로 그 목소리가 전보다 작아졌지만, 예상되는 여타 非OPEC 산유국의 생산감소 추세로 미루어 석유수출국기구의 威勢 역시 앞으로 커지면 커져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과거 10여년간 성공적으로 기법(Know-how)을 축적해 왔고, 또 앞으로도 견지해 나가야 할 정책중 原油수급의 안정확보와 에너지절약의 계속적 추구를 빼 놓을 수 없다.

즉 原油도입의 경제성제고를 위한 導入先 다변화를 계속 꾀하는 일방으로 언제 있을지 모를 미래의 석유파동에 대비, 中東등 기존 對輸入先과의 경제·비경제 차원을 망라한 資源外交強化를 통해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비축량의 적정확보·유지를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전략비축을 늘리고, 또 민간기업을 통해 경제비축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석유시황에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는 情報기능의 강화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공히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Oilman)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마린브油田의 성공사례가 여실히 증명하듯이, 외국회사와 콘소시엄을 통한 해외油田 개발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하겠고 中共·소련등 공산권 大産油國으로부터의 직접도입도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생각된다.

소비절약 역시 인류가 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융합 및 태양열 사용을 현실화내지 상업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심건 종건 의존해야 하는 石油, 석탄등을 포함한 化石에너지의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대안일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정책만을 油價의 상승기·하락기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시각을 업계쪽으로 돌려보면 精油社 쪽에도 할일은 산적해 있다. 사실 정부의 두터운 보호막 속에서 적정이윤 보장·자금난 해소등의 하소연 외에 스스로 얼마나 自救策을 강구해 왔는지 자율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萬에 하나 구조적 한계라는 미명하에 「큰 이익은 없지만, 망할리도 없다」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지닌채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古典의 「Say의 법칙」속에 안주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자문을 던져야 할 때다.

광고 안해도 팔리는 제품이니까, 또 어차피 같은 가격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판매자의 소비자 서비스 不在속에 고객위주의 공급(Client-oriented Supply)에 철저하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은 소위 精油社 직영주유소가 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간혹 들릴 때 마다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다.

향후 우리 경제·사회를 주도할 開放化·自律化의 흐름은 기업의 원초적인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이윤추구의 차원을 넘어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국가사회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대중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기업의 생존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언제부터인지 혹은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외한적 입장에서의 일반국민의 精油社를 보는 視角은 썩 고운 것만은 아닌듯 하다. 아마도 대규모 모장치산업의 특성상 초기 외국 메이저와의 合作이 불가피했고, 대부분 재벌그룹사의 계열사라는 점등이 일부 자본주의 의식에 덜투철한 대중들로 하여금 先入見의 색안경을 쓰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혹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과거 두차례에 걸쳐 천정부지로 치솟던 油價와 이로 인한 물가양동의 악몽이 정유사의 이미지에 잘못 오버랩되어 연상되는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오해내지·과장된 시각이야 세월이 흐르면 교정이 되겠지만, 소위 매출액이 몇조원에 달하고 국내기업랭킹 최상부에 오르는 정유사들의 홍보조직이, 매출액이 그 10분의 1도 안되는 제조업체보다 빈약한 모습을 보느라면 그 Image-making 노력부재에도 자업자득의 일면이 있지 않나싶어 안타까운 느낌이다.

精油社건 또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할 수 있는 動資部건 간혹 서로의 시각에 몰두한 나머지 記者들 입장에서는 동전의 앞, 뒷면같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들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輿論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행히도 정작 여론을 의식해야 할 결정은 일방통행으로 내려버리고, 설사 여론에 逆行하면서라도 소신있게 밀고나가야 할 사항은 눈치작전 끝에 슬그머니 거두어 들이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신문은 일반대중보다 반보 앞선 정보를 무기로 여론을 형성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거대해진 여론에 의해 스스로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公益性和 商業性을 다 같이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의 매체일 뿐이다.

정부와 업계나 스스로의 입장을 보다 겸허하고 진솔하게 드러내고 이를 발판으로 진정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정책·기업활동을 펴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이든 언론이든 그릇된 색안경을 언제까지나 끼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

# 엄격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석유를 공급하자.